

재활용폐기물 분리배출은 의무사항

전주시, 페비닐·스티로폼 등 재활용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 강화키로

최근 수도권 등 타지역에서 공동주택의 재활용폐기물이 수거되지 않아 이슈가 된 가운데 전주시가 재활용폐기물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전주시의 경우, 재활용폐기물 수거에 혼선을 빚고 있는 타 지역과 달리 민간대행업체와의 계약을 통한 안정적인 수거가 이뤄지고 있다.

전주시는 재활용 가능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페비닐류 및 스티로폼에 대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홍보를 중점

실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비닐류 재활용폐기물 배출요령은 음식물 등 이물질이 깨끗이 씻은 상태로 배출하고, 이물질이 묻어 있는 비닐류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또, 스티로폼 중 상자류는 테이프와 상표 등을 제거한 상태로 분리배출하고, 용기류 등 1회용 스티로폼은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이 씻어 배출해야 한다. 색상이 있거나 이물질로 오염된 포장재는 재활용되지 않는 만큼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는 비닐봉투 사용 억

제정책을 강화하고, △페비닐 처리비용 지원 △재활용품의 수거·선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의 처리방법 전환 등 중앙정부의 재활용 정책에 신속하게 대응해 시민들의 불편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기준으로 전주시 재활용 폐기물 발생량은 23,560톤으로, 이중 페비닐이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또, 시민들의 배출 습관이 편리성 위주로 흐르면서 음식물 등 이물질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의 페비닐을 배출하거나 소각성상의 폐기물 등이 혼합 배출되면서 배출되는 전체

페비닐의 10% 정도만 재활용되고 나머지 대부분은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백순기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재활용품 분리배출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생활을 위해 시민들이 꼭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며, 재활용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처리시설의 용량 부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중심으로 배출성상을 개선하는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민근 기자

수인성 전염병 예방으로 시민건강 보호

전주맑은물사업본부, 다중이용시설 지하수 바이러스 표본검사

전주시가 먹는 물을 통해 전염될 수 있는 A형 간염과 노로 바이러스 등 수인성 전염병의 예방으로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강화한다.

시는 다중이용시설의 지하수에 대한 수인성 전염병 바이러스 표본검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과 3월 주요 다중이용 시설 2만3884개소에 대한 지하수 사용현황 조사를 실시하는 등 수인성 전염병 감염에 선제적 대응해 왔다.

특히, 시는 조사결과 지하수를 사용하는 430개소 지하수시설을 5개 권역(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으로

나뉘어 거점별·용도별 총 20개소의 표본 지하수를 선정해 수인성 전염병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매월 5개소씩 총 4회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시는 맑은물사업본부(하수과, 급수과)와 보건소(보건행정과),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미생물과), 전라북도 감염병관리 지원단, 전북대학교 생명공학부 등 5개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실무협의를 통해 검사대상 지하수시설을 선정해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김민근 기자

완산구,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조사 실시

전주 완산구는 4월 9일부터 6월말까지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토지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은 7월과 9월 2부의 1씩, 일반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각각 부과된다.

조사는 비과세·감면 건축물의 고유목적 사용여부 및 4층이상 화재위험건축물의 지역지원시설세 부과세율 적용 적정여부, 가설건축물 및 무허가건축물 사용현황, 종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의 현황 등을 확인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재산세를 종과세하는 고급오락장에 대해서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완산구 전체 유흥주점을 현장조사하여 과세누락을 차단하고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완산구는 세부과정을 총괄반장으로 하는 3개반 21명의 구·동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주의사항 및 조사요령 등 업무연찬을 실시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 열린시민강좌 개최

제172회 전주시 열린시민강좌가 10일 500여명의 시민들이 전주시청 강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열렸다.

이번 초청강의에는 인권연구소 '창'의 연구활동가이자 '공부공부', '나는 세상을 리셋하고 싶습니다', '공부중독' 등의 저자인 엄기호 강사가 초청돼 심도 있는 강연을 펼쳤다.

엄 강사는 이날 '위기에 처한 친밀한 관계의 재건을 위한 성찰'을 주제로 한 특강을 통해 참석자 시민들로 하여금 나와 세상, 나와 타인과의 관계 재정립 문제부터 현안에 대한 관점의 문제까지 지금 해야 할 일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제공했다.

다음 강좌는 오는 24일 신병주 교수의 '세종이 꿈꾼 세상'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민근 기자



제172회 전주시 열린시민강좌가 10일 500여명의 시민들이 전주시청 강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열렸다. 이번 초청강의에는 엄기호 강사가 '위기에 처한 친밀한 관계의 재건을 위한 성찰'을 주제로 한 특강을 했다.

전주시, 출산장려사업 대폭 확대한다

조례 시행규칙 이달 입법예고 첫째아 출생 축하금품 신설 출산장려금 둘째아 이상 다자녀 우대증 마지막 자녀

전주시가 출산장려사업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는 그간 둘째아 이상부터 지급돼온 출생 축하금품이 첫째아 탄생가정에도 지원되고, 출산 축하금과 자녀양육비 지원을 위한 거주요건과 소득기준 등도 완화된다.

전주시는 출산장려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달 말 개정·공포된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의 시행규칙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자치법규의 주요내용은 제명 및 내용 중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저출생'으로 변경함으로써 인구감소 현상과 관련한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을 해소하고 국가 및 사회의 책임성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시는 첫째아에게 지급하지 않던 출생 축하금품을 첫째아에게도 지원하고, 종전 둘째아에게만 지급하던 출생 축하금도 둘째아 이상 가정에도 확대 지원키로 했다.

첫째아에 대한 출생 축하금품의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현재 임신부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의견수렴 절차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반영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에 대한 출생 전 일정기간 거주요건과 소득요건 제한을 완화, 앞으로는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서 전주시에 출생신고를 하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 자치법규에 따른 지원대상은 오는 7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그간 만18세 이하 세 자녀 이상 출산 가정에 발급해 우대혜택을 제공해온 'Happy! 다둥이 우대증' 발급 기준도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정 중 마지막 자녀가 만18세 이하인 가정으로 대상을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다톡이 자녀를 둔 가정에도 우대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우대증의 유효기간 조항을 신설해 만료기한을 명확히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오는 6월부터는 기존 종이코딩으로 제작 발급해온 다자녀 우대증을 디자인과 휴대성, 데이터의 정합성 등을 고려한 전자식 PVC 카드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다톡이카드 훼손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근 기자

전주 원룸에서 남녀 숨진 채 발견

전주시내 한 원룸에서 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1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0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원룸에서 A(37)씨와 B(50·여)씨가 숨져 있는 것을 수색 중이던 경찰이 발견했다. B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가족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발견 당시 A씨는 현관에 목을 맨

상태였고, B씨는 방 안에 쓰러져 숨져 있었다.

하지만,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B씨 목에 상처가 있는 것으로 미뤄 타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유족을 상대로 이들의 관계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삼민 기자

10대 투숙객 추행한 펜션 주인 집행유예

전주시법 제1형사부(박정재 부장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에서 투숙객을 추행한 혐의(주거침입 준강제 추행)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전북 무주군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전 1시39분께 펜션에서 투숙객이 머무르는 방에 침입해 술에 취해 잠든 B(19·여)씨

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전날 펜션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지인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삼민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